

안철수, 대통령 퇴진→여야 총리 임명→총리 주도 정치일정 확정

박영선, 국회 비상시국위서 총리 추천·하야 로드맵

대통령 퇴진 전제… 靑 거부땀 즉각 탄핵 절차 돌입

광화문 집회 후 정국 해법은?

아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등 퇴진을 전제로 각종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3일 혼돈스러운 현 시국 수습방안으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선언→여야 합의 총리 추천 임명→총리가 주도해 대통령 퇴진시기를 포함한 향후 정치일정 확정' 절차를 밟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동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간담회 및 팬클럽 '동그라미' 창립 대회에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수용해 책임임과 퇴진하겠다'고 정치적 퇴진을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여·야 합의

총리가 대통령의 법적 퇴진 시기까지 명시한 '향후 정치적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야 합의 총리에 대해 "역량이 좋아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으면 관리형 총리밖에 될 수 없다"며 "시급한 개혁과제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남은 14개월 임기를 끌고 갈 수 없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당원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새 총리를 통한 '최순실·우병우 사단'이 제거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국정조사·별도 특검 등 국민의당이 요구해

온 '비상시국 수습 4대 해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에서"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안정적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른 '비상시국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제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소집, 국회 추천 총리 문제 등을 포함한 '안정적 하야' 대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중론을 모으자는 주장이다.

국회법 제63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카드 등에 대해 당 주류 진영에서는 불만해하는 기류가 없지 않아 총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은 이날 "19일경으로 예정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중대 변수"라며 "교사법, 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개인성명에서 "청와대가 (퇴진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 3당이 단일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

혼돈의 새누리… 친박·비박 따로따로 시국회의

친박 “단결해 위기 극복을”

비박 “당 해체 추진 불가피”

당 지지율 17%… 朴정부 최저

새누리당은 13일 전일 '100만 촛불집회'와 관련, 일제히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향후 수습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류와 비주류의 기류가 엇갈렸다.

비주류는 당 해체를 추진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촉구했지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당 구성원의 단합을 통한 위기 타개가 우선이고 맞섰다. 특히 비주류 일각에서는 '탄핵' 주장까지 하고 나서 계파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로 평에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응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비주류는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당 해체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해 '2선 후퇴'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특히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



‘침통’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주도 비상시국회의에서 발언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은 "현 국정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국민의 뜻은 새누리당이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국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로, 전주와 같았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1%를 기록해 수위를 지켰으며, 새누리당이 1%포인트 하락한 17%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당은 13%로 보합이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 시절을 포함해도 가장 낮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 가능성

검찰 조사 방식 관심…비리 공모·대기업 압력 여부 등 쟁점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수사의 큰 두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한용재 형사8부장검사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구속된 최순실씨가 저지른 비리를 사전에 알았거나 직접 공모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을 위해 "현제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적 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권이 반발이 심해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상군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중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적 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괴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 3당이 협정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강행하려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 과시용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연설문을 최씨에게 보내주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중요 조사 대상이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전례가 없지만, 소환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1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가 몰리는 등 분노의 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소환조사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환조사는 다만 사실상 청와대 측 결심과 양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만약 소환조사를 한다면 공개로 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지 등도 조율해야 할 민감한 문제다.

확인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점에서 대통령 조사는 신문조사 열람까지 합해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헌정 사상 이변이 처음이다. 그만큼 검찰은 조사 방식과 내용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응하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